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

보도일시	'19.11.19(화) 15:30	배포일시	'19.11.18(월) 15:00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나채목 과장, 이선아 사무관(02-397-1350, 1323)		
관계부처	안건 관련 부처 담당과/담당자 정보☞ 붙임 3 참조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월 19일(화)**, 서울 구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업, 지역경제의 중추인 산업단지 지원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업 고용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방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기존 4차·10차 위원회 의결 안건*의 안착을 위한 후속대책으로써 건설일자리 지원대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도 함께 다뤄졌다.

* (4차 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0차 위원회)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 또한 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G캠프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 지원정책 추진방향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재직자,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13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Ⅰ. 일자리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 그동안 **산업단지 개선대책**을 수차례 발표*했으나, ①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②산업단지 **가동률 및 고용여력 하락**, ③**입주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으로 **전문기관 연구**,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기관 협력사업**을 중점 강화한 **공동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마련한다.

* 판교2밸리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 방안('17.12),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방안('18.3),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18.12),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19.5) 등

□ 이를 위해, **산업단지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4대 대전환'**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한다.

< 산업단지 지원방식 4대 전환 >

❶ **(지원대상의 전환) 개별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 **허브산단중심의 지역혁신 종합**지원

- ■ 개별 산단 중심으로 지원
- ■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단 부족

⇒

- ■ **혁신거점을 선정***하고, **집중해서 지원**
  * ('20) 5개 내외 → ('22) 전국 15개 내외
- ■ H/W 및 S/W의 **범부처 사업 총망라**

❷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전환) 중앙주도** 산단정책⇒ **지역주도**로 **산단중심 혁신계획** 수립

- ■ 지역산업 혁신계획과 괴리
- ■ 산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지역 산업 진흥계획 수립

⇒

- ■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하여, **산단·연계산단·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계획** 수립
- ■ 지역별·산업별 특화 전략 등과 연계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컨설팅 지원**

❸ **(중앙부처 지원방식의 전환)** 부처간 **협력·연계** 미흡⇒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

- ■ 부처별 사업 대상 산단을 **개별 선정**하여 **분산 지원**

⇒

- ■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인센티브가 되도록 **사업간 연계**강화
- ■ **협업예산** 형태로 **지속·집중** 지원

❹ **(산단 조성·관리 방식의 전환) 규제중심** 운영⇒ **기업중심·진흥중심**을 통한 **투자확대**

- ■ **획일적**인 업종·입지규제 적용
- ■ 산단 **내부 문제**해결형 사업

⇒

- ■ 산단 **내부**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선**
- ■ 산단 **내부·외부를 연계**한 **종합적 지원**

□ **지역에서 주도하는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범부처 차원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업예산 방식 시범도입), ②**진흥방식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1.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수립

① **(지역자율) 개별 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 기존의 지역 중심 산업진흥 계획은 업종별 프로그램(S/W) 지원 정책 중심으로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한 S/W+H/W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

** 중앙중심 국가산단 위주의 산단정책을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진흥계획'**으로 전환하고, 향후 **산업단지를 매개**로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촉진

○ **지자체**는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감안해 **기존**(부처, 지자체) **및 신규 산단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한다.

* 산단 관리기관, TP,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원기관 등 지역 내 혁신주체들과 협업하여 수립

○ **거점**(hub)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 기능**을 **집적**하되, **연계**(spoke) **산단·대학·지역** 등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

○ **산업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hub-spoke 연결),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예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유형**(안) >



[주력 제조] 거점산단 허브형



[첨단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허브형

※ 지역 수요에 따라 **대학중심** 허브형(교육·연구), **공공기관** 허브형(혁신도시)도 가능

② **(중앙지원)** 지자체가 **혁신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되, **중앙 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메뉴판** 제공,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TP, LH, 국책연구기관(산업연, 국토연 등) 등

○ 산업·노동·기업 단체, 유관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산업 및 산단을 육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한다.

* 핵심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산업별 특화 전략 등과 연계

○ **지원메뉴판**에는 산단, 연계 산단, 주변 지역을 포함한 **H/W 및 S/W**의 **범부처 사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자자체**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실시***하고, **법적 근거 마련**('20) 및 이행실적 점검·보완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5개 내외 지역의 계획을 선정**('20.상)하여 **우선 착수**('20년 예산활용)하고, **'22년까지 전국 15개 내외**로 확대

< (예시) **산단 중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연계 산단 구성**(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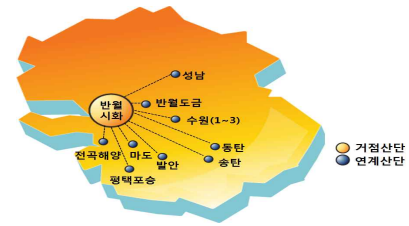
【창원산단 거점&연계 방안】



【연계산단 일반현황】 ('18년말 기준)

시군	산단명	업체수 (개사)	생산액 (억원)	거리 (km)	주요업종
창원시	마천	114	10,541	15	기계,전기전자
	진해	3	4,954	13	조선
	진북	48	6,902	20	기계,전기전자
김해시	골든루트	126	15,144	15	기계,전기전자
	진영죽곡	52	8,880	12	기계 전기전자
함안군	함안	97	3,860	34	기계,전기,운송
창녕군	대합	45	6,168	45	기계,전기,운송

【반월시화산단 거점&연계 방안】



【연계산단 일반현황】 ('18년말 기준)

시군	산단명	업체수 (개사)	생산액 (억원)	거리 (km)	주요업종
안산시	반월도금	102	3,464	10	기계
성남시	성남	3,180	91,013	33	전기전자, 기계
수원시	수원(1~3)	712	60,800	20	전기전자, 기계
평택시	포승지구	271	101,240	38	기계, 정밀화학
	송탄	150	17,726	40	정밀화학, 기계
화성시	동탄	398	16,338	33	기계,전기전자
	마도	226	2,480	15	기계
	발안	485	2,075	30	기계
	전곡해양	180	4,482	16	정밀화학,기계

※ 연계산단은 거점산단과 업종, 사업, 생산액 규모, 거리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가 선정

2. 지역자율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서비스 제공

① **(패키지 지원)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기획·집행·평가 전 단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관리하고, **협업예산 프로그램의 모범사례**로 추진한다.

○ **(협업예산)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19.12월)→ **중기사업계획요구시, 방안제출**('20.1월)→ **'21년도 지원대상 선정**('20.2~4월)→ **'21년도 예산요구시, 패키지 지원방안 요구 및 예산 편성**('20.5~8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 ('19년) 27개 세부사업 약 9,200억원 수준→ 추후 효율화 및 재정지원 지속 확대
* '20년 시범사업은 '20년 예산 확정 후, 각 부처가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 **(규제완화) 제도적 지원***은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지원한다.

* 네거티브 입주규제, 산단형 규제특례, 산단재생 활성화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② **(의결 기구)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계획에 대해 **부처별 검토·협의** 후, **「노후거점산단특별법」**의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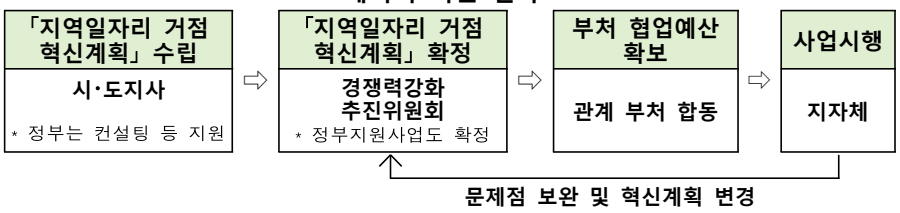
* 국토부·산업부(공동위원장), 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국조실, 민간전문가 등
** 「노후거점산단특별법」에 따른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추진위에 제출

○ **거점-연계 등 계획수립 범위, 사업범위 확대**(노후 산단 외 대상 등) **등을 위해 「노후거점산단특별법」 개정**('20년)을 추진한다.

③ **(시행·점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고, **각 부처는 협력지원**한다.

* 이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 후 혁신계획에 반영

< 패키지 지원 절차 >



3.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흥방식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도입

① **(산단 조성) 수요기업 지원 방식**으로 국가산단, 주변도시 등을 **조성**한다.

○ **국가산단**(국가지정 도첨산단 포함) 개발을 **수요기업** 관점으로 개편하여 입주 수요가 있는 **민간기업**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종 배치, 필지 규모, 지원시설용지 배치 등에 대한 기업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

○ **창업, 중소기업**이 빨리 성장단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기업지원기관**(예: 엑셀러레이터, 창업진흥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② **(산단 관리)** 규제중심에서 **산업진흥·기업지원** 중심으로 **산단 관리 기능을 개편**한다.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편**을 통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산업진흥 방식 관리***로 전환('21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한다.

* 지역 주체와 공동(입주기업+지자체+관리기관)으로 지역 거점산단의 산업단지진흥계획(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산업단지 지원계획 + 기반시설·안전·환경 관리계획) 수립

○ **산업단지공단**의 **산업입지연구소 및 현장**(지역) **중심의 조직 강화**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에서 **산업진흥기관**으로 전환('20년)한다.

○ 산업별 지원에 특화된 **전문기관**(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창업진흥원 등)의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확대한다.

○ (가칭)「**산단 재생 지원센터**」 설립(LH, '19.12) 및 「**산단 일자리 지원센터**」 강화(26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의 사업시행** 등을 위한 각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패키지 지원 사업** 및 **제도개선**의 **세부과제를 지속 발굴·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① **(일자리 창출)** 제조업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과 지자체 참여**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 **산단 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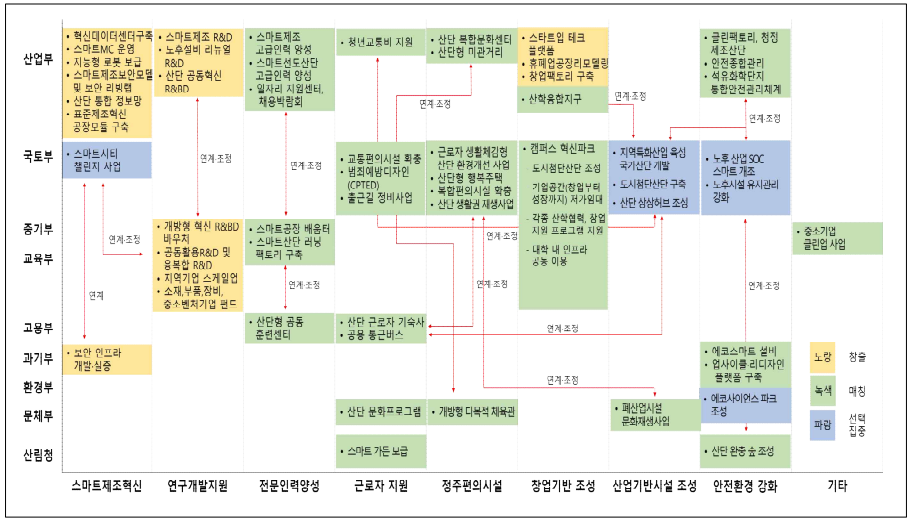
* (1)산업단지 스마트화, (2)제조·서비스 융합, (3)산단 조성·관리 개선

② **(일자리 매칭)** ①**청년**인재 양성·취업연계, ②쾌적한 **근로·정주**환경, ③**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한다.

③ **(선택과 집중)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심내 노후 산단**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형 신규산단을 조성**해 나간다.

* (1)도심 내 노후산단을 도시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조, (2)지역·산업별 맞춤형 신규산단 조성

< (예시) 패키지 지원 세부사업 등을 통한 지원 메뉴판 구성(안) >



□ **'지원방식의 4대 전환'**을 통한 **산업단지 대개조의 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과제를 최적 조합하여 **산단유형별 '일자리친화형 산업단지 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별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 ①스마트산단, ②도시첨단산단, ③노후산단 재생 등 **('20년에 5개 내외 시범사업 추진)**

○ 이를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역주도**의 **'산단 중심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범부처 패키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별 설명회**를 '19.12월부터 시행, ** **범부처 협의체**(TF) 등 구성·운영

II.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 건설분야 일자리는 지난 **'17.12월** 제4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 **'임금 직접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에서 이전 3년간 연간 200억 이상 발생하던 **체불**이 **근절**('18.추석, '19.설·추석)되었고, **전자카드**와 **기능인등급제** 도입, **퇴직공제** 납입액 인상(4,200→5,000원, '18.1)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불법 재하도급, 안전 경시 풍조 등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건설산업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였다.

* '17.9월부터 양대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산연, 건정연, 공제회 등), 관계부처(국토, 기재, 고용, 공정 등) 참여로 총 35회('19년 12회) 개최

□ 첫째, **적정수준**의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인력양성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통합관리**를 통해 안전문화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십·반장 등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을 차단**하는 등 건설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한다.

* 필수교육 이수증에 체류자격·기간 명시, 건설사의 대조확인 절차 신설 등
** 혐의업체 추출 고도화, 직고용 및 건설사업자 등록 촉진 등 제도권내 관리 강화

② **정보제공 확대, 맞춤형 알선** 등을 통하여 십·반장 인맥 등 낙후된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조합원 채용강요** 의법처리(채용절차법 등)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킨다.

③ **특성화고교 맞춤형 교육** 후 **정규직** 채용, **공공공사 인턴제도** 도입 등 우수인력 양성과 함께 건설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인력수급 계획** 수립('20.下)으로 **인력육성**도 지속 지원한다.

□ 둘째, 그간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Eng.** 분야 종사자와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여성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④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의 **유상운송**과 타 대여사업자 기계 **재임대**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도를 시장에 확고히 정착시켜 **대여대금 지급**을 강화한다.

⑤ 과도한 업무, 적정대사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과 하도급사 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한 **소규모 업체 성장 지원** 등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일자리 질도 개선한다.

⑥ 미끄럼 방지턱, 안내판 글씨 확대 등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 **여성근로자**도 보호해 나간다.

□ 셋째, 건설근로자 **근로환경**과 **현장안전**도 차질없이 지속 개선한다.

⑦ **전자카드제**(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기능인등급제**(통합경력관리시스템)는 **시행방안**을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보상과 연계**하여 적정 처우를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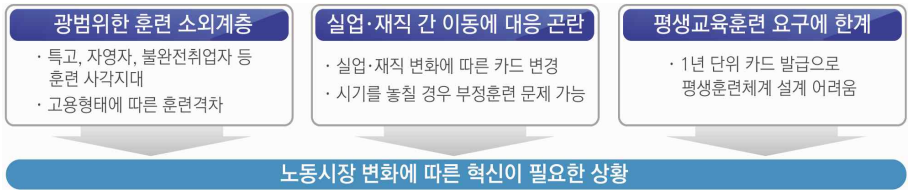
⑧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⑨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현장점검·감독강화**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보호구 지원·위험작업 자격기준 전면 재검토 등 안전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19.12)키로 하였다.

* 노사민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실성 제고

Ⅲ.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통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위원장: 경기대 강순희)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발표하게 되었다.

□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현 행		개 편
지원대상	· 실업자 · 재직자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
유효기간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 200~300만원	→	· 300~500만원

①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②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 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인 주도 훈련**을 **확산**한다.

③ 지원기간은 길어지고, 지원규모는 확대

-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훈련생은 **HRD-Net**을 통해 **훈련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④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한다.

⑤ 훈련과정의 질 제고 병행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20년 정부 예산안 627억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역량이 검증된 기관** 중심으로 **기업수요**를 **고려**한 **양질의 훈련 제공**, 훈련기관·협약기업이 원하는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

- **과정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⑥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차등하고,

- **저소득 재직자**(예: EITC 수급)에게는 **자부담율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정착**되면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온라인-집체 훈련 간 융합** 등 **혼합훈련**(Blended Learning) **중심**으로 **훈련과정 개편·확산 노력**도 **계속 병행**할 방침이다.

붙임 1 제1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2019. 11.19(화)** 14:00~15:30(90')

□ **장소: 메이커스페이스G캠프**(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서울디지털단지(G밸리) 내)

□ **참석대상: 부위원장(주재)**, 위원(당연직 15명*, 위촉직 13명**), **안건관련 부처 장관*****

* 당연직: 기재·교육·과기·행안·산업·복지·고용·여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KDI·노동연·직업능력개발원장

** 위촉직: 김주영(한국노총), 김명환(민주노총), 조돈문(비정규직), 박용만(상의), 손경식(경총), 김기문(중기협), 전용만(중고령), 김영순(여성), 김다혜(청년), 김원석(농업), 안건준(벤처), 김수영(자치단체), 김재경(사회적경제)

*** 문체부·환경부·국토부 장관

□ 안건(안)

○ **【의결 1】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 **【의결 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 **【의결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2	**개회 및 국민의례** (2')	* 사회: 일자리기획단장
14:02 ~ 14:05	**부위원장 모두말씀** (3')	
14:05 ~ 14:25	**안건보고** (20')	* 모두말씀 이후 비공개
14:25 ~ 15:25	**토론 및 의결** (60')	
15:25 ~ 15:30	**부위원장 마무리 말씀**(3') **및 폐회**(2')	

붙임 2 사전 현장간담회 계획

□ **일시: 2019. 11.19(화)** 13:20~13:50(30′)

□ **장소: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서울디지털단지(G밸리) 내)

□ **참석대상**

○ **부위원장(주재)**, 산업·고용·국토·중기부 장관, 일자리수석, 산단공, 입주 업체 및 지자체 관계자, 재직자 등 15명

□ **안건**

○ 일자리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지원 **정책 추진 방향**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3:20 ~ 13:22	**개회** (2′) * 입장 시 방명록 작성	* 사회: 일자리위 총괄기획관
13:22 ~ 13:24	**모두말씀** (2′)	
13:24 ~ 13:44	**현장목소리 청취 및 토의**(20′)	
13:44 ~ 13:50	**마무리 말씀** (1′) **및 라운딩** (5′)	* 사진촬영 * 안내: 센터 책임자

※ 연결 통로를 이용하여 본위원회 행사장으로 이동(안내: G캠프 책임자)

붙임 3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일자리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일자리 위원회	정책개발부	박성궐 팀장 (02-397-1306)	김승현 사무관 (02-397-1372)
			박용민 팀장 (02-397-1304)	김계흥 서기관 (02-397-1303)
	산업부	입지총괄과	조웅환 과장 (044-203-4430)	이길준 서기관 (044-203-4433)
	국토부	산업입지 정책과	김근오 과장 (044-201-3674)	김성환 서기관 (044-201-3677)
	고용부	고용정책 총괄과	김부희 과장 (044-202-7210)	이용우 사무관 (044-202-7211)
	중기부	지역혁신 정책과	엄진엽 과장 (042-481-1695)	강효민 사무관 (042-481-1697)
	과기부	정보통신 정책과	송상훈 과장 (044-202-6220)	박현선 사무관 (044-202-6222)
	교육부	교육일자리 총괄과	천범산 과장 (044-203-6883)	이솔잎 사무관 (044-203-6494)
	문체부	미래문화 전략팀	김선아 팀장 (044-203-2391)	곽신석 사무관 (044-203-2396)
	환경부	환경산업 경제과	이율범 과장 (044-201-6701)	정수명 사무관 (044-201-6711)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	김주열 과장 (042-481-4223)	예견희 사무관 (042-481-422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일자리 지원대책	국토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 (044-201-3504)	김목진 사무관 (044-201-3507)
	고용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최태호 과장 (044-202-7404)	박미연 사무관 (044-202-7405)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고용부	인적자원 개발과	김종윤 과장 (044-202-7319)	진영훈 사무관 (044-202-7313)